

【서평】

서평: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몇 가지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도서출판 부키, 2010.

정 원 규

2010년은 두 권의 화제작을 탄생시켰다. 모두 알고 있듯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그것이다. 이 두 권의 화제작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하나의 일관된 흐름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경제발전에는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국민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학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풍부한 역사적 실례를 들어 재확인해줌으로써 독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대중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이 책이 전문가, 특히 경제학자들에게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자의 집필 의도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들과 그들의 주장을 겨냥하고 있으니 만큼, 신자유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진보주의 경제학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이유는 장하준

의 주장이 박정희 시대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수한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국가의 강력한 경제 개입을 옹호하는 것은 사실이니, 이에는 국가의 경제 개입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장하준 본인의 책임도 있다 하겠다.

하지만 필자는 장하준이 누구 편인가에 대한 이러한 논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하준의 정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필자가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취할 수밖에 없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장하준 자신이 한편으로 경제학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ing 16)<sup>1)</sup>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의 복잡성을 줄이려면 일부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강조는 필자]

부연하면 그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이유는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다. 이러한 모호한 서술 방식은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Thing 23)에서도 등장한다. 여기에서도 그는 한편으로 ‘법대나 공대 출신이 더 좋은 경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317)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이 불필요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학문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323). 자유 시장 경제학에 매몰되지만 않으면 경제

1) 저자의 책을 인용하는 경우는 간략히 괄호처리 하였다.

학은 여전히 유용한 학문일 수 있고, 법대나 공대 출신들이 경제 정책을 잘 입안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자유 시장 경제학과는 ‘다른’ 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sup>

이미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필자가 이 대목에서 장하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가 진보인가 보수인가, 또는 이 책이 박정희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긍정하는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주장이 경제학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장하준의 주장을 탈경제학적인 것으로 읽는다면 너무 고려하지 않은 점이 많고, 경제학적인 것으로 읽는다면 안 그래도 넘쳐흐르는 경제학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하버마스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체계의 생활세계 침투를 더욱 확장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탈경제학적인 것으로 읽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장하준은 「결론」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주류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주장을 한다. 가령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탈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 믿음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자본주의를 해야 하며(328-30),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332).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336),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339).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과연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경제학자가 아니니 일단 장하준의 주장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더라도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학 외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다른 유형의 자본주의를 채

2) 저자의 이런 입장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으며,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 좋은 것도 아니다. (각각 Thing 4, 17, 10, 18) 하나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과는 다른 ‘상식’이지만, 그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설명된다.

택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현재 유형의 자본주의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동의해야 할 것인데, 가령 정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아가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균형을 맞추거나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하는 일은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아마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장하준은 자신의 주장은 지금까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잘못 이야기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다른 사회과학적 측면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그는 『Thing 4』에서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고 주장한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가전제품이 집안일에 들이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줌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경제력을 얻게 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대폭 향상되는 등의 큰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음에 반해, 인터넷의 변화는 그러한 질적인 변화를 야기했다는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의 변화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에만 채택될 수 있는 증거이지, 가령 필자가 선호하는 정치철학적 관점이나 다른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하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전제품의 발달이 남녀의 지위 변동을 불러일으켰는지, 아니면 역으로 남녀의 지위 변동이 가전제품의 발달을 가져왔는지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필자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을 때, 대학 행정에 컴퓨터가 도입된 이래 조교의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해 다른 대학원생들과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직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교수나 조교처럼 위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명의 이기는 약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세탁기의 발달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왔다는 그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한, 곧 경제학자들의 월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의 월권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그는 『Thing 17』에서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과도한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으며,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이제 정말 아무런 경제적 효과도 없는 교육은 그만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가지만 보자. 첫째는 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육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분류’ 기능도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여건이 악화될수록 이러한 ‘분류’의 기능은 점점 더 강화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자신이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학력’보다 더 호소력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무익하니 가령 가문이나, 기부금이나, 또는 추첨으로 취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이 낭비적인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지적하는 것만으로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로 교육은 경제학적 효과와 무관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조금 더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는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나, 참된 의미의 시민이 늘어나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 또는 참된 의미의 시민이 만들어 내는 사회상이나 삶의 모습은 국민소득의 증가유무와 무관하게 크게 다를 수 있다. 물론 그도 교육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다(250). 하지만 그의 주장이 경제학적인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려

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그쳐야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251)고 까지 주장하지는 말아야 한다. 교육은 경제학적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평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필자는 장하준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편이다. 자유 시장 경제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체제는 아니며, 대기업을 살찌우는 것이 곧바로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되어서는 안 되며,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제조업을 더 소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 시장은 (역설적으로)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경제가 필요하며, 큰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장하준은 경제학자가 경제를 오도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자기고백까지 덧붙인다. 근래 보기 드문 경제학자의 양심선언인 셈이다.

그런데 이왕에 다른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준 만큼, 이런 것도 말해 주면 얼마나 더 고마울까?

- 어떻게 우리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게 되었을까?
- 왜 우리는 대기업이나 경영인이 지나친 이윤을 올리는 것을 막지 못할까?
- 어떻게 해야 금융시장을 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 경제계획과 복지정책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과 목표로 세워야 할까?
- 큰 정부를 만들면 정부관계자들은 경제계획과 복지정책만 시행하려고 할까?
-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과 불공평한 우대 요구에 반발하는 선진국과 초국적기업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금 지나친 요구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경제학적, 또는 탈 경제학적으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하준이라면 이런 의문들에도 쉽게 대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